

성장과 복지의 정치사회적 진단과 대안

The Limits of Growth in Political and Social Perspectives:
Diagnosis and its Alternative

오정수

- I. 서론
- II. 성장지상주의의 진단
 - 1. 형성과 경제적 성과
 - 2. 정치적 역학
 - 3. 사회적 병리
 - 4. 비복지 - 사회적 비용
- III. 성장, 정치역학과 복지의 관계
 - 1. 경제성장 요인과 복지
 - 2. 정치역학 요인과 복지
 - 3. 평가
- IV. 대안
 - 1. 성장지상주의 가치의 타파
 - 2. 국가정책 우선순위의 조정
 - 3. 공동체적 삶의 문화 확립

Abstract

Since the 1960s the state-initiated industrialization in Korea brought about a faith or an ideology, putting first priority on growth, which has prevailed over time in the mind of policy-makers and most of people. Now it is also reflected in the policy goal of this government, 'globalizatio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tential of the state. However, notwithstanding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the fruits of growth were not evenly distributed for the welfare of people.

Many theorists have developed different theorie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Industrialization theory and political dynamics theory are outstanding among those theories. The school of industrialization maintains that with the progress of economic growth measured by G.N.P. per capita the level of welfare spending increase. In Korea, however, the low level of welfare spending and its irrelevance to economic level do not support the industrialization theory. In political dynamics, the ratio of working class has increased steadily in Korea. Bu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working class ratio and social welfare spending. The growth-priority ideology is the most powerful factor to explain the low level of social welfare, with the factor of divided structure between South and North.

As results, the underprivileged is suffering by diswelfare or social cost caused by rapid economic growth. Korea is ranked behind i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spending to G.N.P., so that she is known as a welfare leggard country with many social problems including poverty, housing, environment, and some phenomena of social pathology such as

'the hurry-up syndrom', the upsoaring ratio of criminal offences and juvenile delinquency and so on.

To overcome the limits of growth in this country, first of all, the ideology of growth-priority should be destroyed in the mind of people. Also the priority of policy must be put on the quality of life rather than growth-for-growth. And the culture of community life should be fostered by various Christian civil movements.

I. 서론

최근에 우리 사회가 경험한 두 사건은 성장지상주의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웅변적으로 대변하였다. 우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성장지상주의의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삼풍은 핑크빛 외형의 사치가 인간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으며 물질만능과 성장지상을 추구해 온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공허와 허탈감을 심어준다는 사회적 의미를 알려주었다. 실로 삼풍이 표방한 쇼핑(shopping), 스포츠(sports), 스피릿(spirit)의 삼풍정신은 소비, 레저, 대중문화라는 현대 물질문명의 상징이었으며, 화려한 핑크빛으로 단장한 외형은 물질적 이상주의를,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건물관리와 구조변경을 위한 뇌물수수, 인명경시태도는 성장지상주의의 상징이었다. 성장지상주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 준 사례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는 술한 사건들은 이제는 뉴스가 아닌 상투적 신문의 장식이 되었으며, 외국의 한 언론은 한국을 '사고의 왕국'(The Kingdom of Accidents)으로 묘사하였다.¹⁾

둘째로, 지방선거를 통한 정치권력에 대한 민심이반은 이러한 이른바 '한

1) Newsweek, 1995. 7. 10.

국병'의 치유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건 국가권력의 개혁정치의 실패라는 정치적 의미를 상징하였다. 집권 초기 개혁정책에 대하여 90%에 달하였던 국민적 지지는 거의 실종되었고 국민들은 이제 국가권력에 의한 개혁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영적인 의미를 덧붙인다면, 성장지상주의의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고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받아들였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더 큰 재앙이 없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진 한국의 경제성장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받아들여져 있다. 1960년대 이후 국가의 중앙집권적 권력에 의한 산업화 정책은 성장이라는 유일한 목표하에 여타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국가의 강력한 주도하에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전통적으로 국가중심성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국가주도로 시작된 성장우선주의는 하나의 신앙과 같은 파급효과를 낳았으며, 국가 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전국민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성장이 아닌 어떠한 가치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으며, 국민들은 성장지상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왔다. 성장의 신앙에 의한 이른바 “압축적 자본주의화”의 결과, 불과 30여 년만에 경제적 선진국에의 진입을 목전에 두는 신화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성장지상주의는 기독교의 성장과 시기를 같이 하면서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쳐 물질만능주의, 개교회 성장지상주의 등 성장주의 세계관을 파급시켰다. 타 종교는 차지하고라도 대부분의 교회는 국가발전의 방향에 대하여 물질적 축적과 성장의 의미를 반성하고 바른 가치를 전파하기보다는 성장지상주의의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성장지상주의의 정신적 기초까지 확보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산업구조와 사회계급 구조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초래되었고 이에 따른 정치역학의 변화와 함께 노동운동이 조직화되고 격화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조합주의적 통제를 통하여 노동운동을 억압하였을 뿐, 정당정치를 통한 노동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의 장치와 구조를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분배정의의 왜곡으로 부의 편중,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교통과 환경문제, 사회범죄와 건설부조리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충격적 사건들 - 패륜살인, 성수대교 붕괴, 대구도시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은 성장지상주의의 부정적 대가를 상징처럼 보여 주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국가의 정책목표는 박정희 정부의 '조국근대화'로부터 5공화국 정부의 '경제선진화'를 거쳐, 현재 정부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바뀌어 왔지만 성장지상주의는 여전히 국가 정책목표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전제가 되어 있다.

지난 95년 3월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 사회개발정상회담에 제출된 한국의 사회발전에 관한 보고서는 정부의 보고서와 함께 12개 민간단체의 종합보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었다. 이 두 가지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관한 평가에 있어 극단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담고 있었다. 이 두 보고서는 한국의 성장지상주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장지상주의는 야누스의 얼굴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성장지상주의의 정치사회적 진단을 한 이 논문에서는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우선 성장지상주의의 결과를 경제적 성과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러한 성과가 정치역학의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대가, 즉 성장지상주의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성과에서는 국가주도의 성장지상주의가 가져온 산업구조, 계급구조, 소득구조의 변화를, 정치역학의 변화에서는 경제적 성과에 따라 새로이 형성된 국가 - 사회의 역학관계를, 사회적 비용에서는 성장지상주의에 의하여 희생된 최저생활선의 보장, 삶의 질 문제를 다룬다. 이어서 성장, 정치역학, 복지와의 관계를 분석해 성장지상주의의 한계나 사회비용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성장의 결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지상주의라는 거대한 우상을 타파하는데 있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끝으로 성장지상주의의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한다.

II. 성장지상주의의 진단

1. 형성과 경제적 성과

한국의 성장지상주의의 형성은 5.16.으로 정권을 인수한 군사정부가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주창자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출발하였다. 국가의 주도적 역할 외에 한국 사회에서 성장지상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작용한 힘은 오랜 역사를 거친 가난의 경험으로 인한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국민적 염원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잘 살아 보세!'라는 조국근대화의 정치적 슬로건은 구원의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졌다. 또한 초기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성과들은 국가와 민간으로 하여금 경제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과 국민들도 성장지상주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어갔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권력에 의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한 60년대 이후, 모든 경제정책들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의 강력한 주도하에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군사정부는 '조국근대화'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전략으로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높은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3%, 제2차 10.5%, 제3차 10.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적극적 외자도입 정책,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중점지원, 불균형 성장전략 등으로 요약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장전략은 대체로 주효하였다.

그 결과 급속한 사회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초래되었다. 생산관계 측면에서는 이 단계에 이르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점차 기본적인 생산양식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생산양식의 발전과 함께 산업구조상의 변화도 가져

와, 1961년 당시 농림어업 39.1%, 광공업 15.5%, 서비스업 41.0%에서 1972년에는 농림어업 26.8%, 광공업 23.5%, 서비스업 44.0%로 변화하여 광공업의 성장과 농어업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에 따른 계층구성의 변화를 보면, 자본가 계층의 질적 성장과 노동자 계층의 양적 성장이 두드러졌다. 자본가 계층은 양적 구성에서는 0.5~0.6%로서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독점자본으로서 지위를 강화하였고, 농어민 계층은 1960년의 65.2%에서 1970년에는 51.7%로 감소한 반면, 노동자 계층은 1960년의 11.8%에서 1970년에는 24.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신중간 계층과 비농자영자층의 꾸준한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취업 구조상에서는 여전히 1차산업이 50-60% 이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2차산업이 9% 수준에서 15% 수준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3차산업이 35% 수준까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득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절대빈곤의 비율은 1965년의 40.9%에서 1970년의 23.4%, 1976년 16.6%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65년 0.34에서 1970년에는 0.33로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규소득 외 소득과 부의 불평등분배로 사회적 불평등이 이 단계 이후부터 심화되기 시작하는 사회구조상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화 비율은 1961년의 29.1%에서 1972년 44.1%에 이르러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음을 반영하였다.

한편, 산업화의 지속적인 진행으로 7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는 광공업의 비중이 농림어업 비중을 앞서기 시작하며, 공업구조 상에서 중화학공업이 경공업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사회경제적 구성에서도 새로운 지평에 접어들게 된다. 1973년에 이르러 광공업의 비중이 26.2%로서 농림어업의 비중 25.0%를 앞서기 시작하여, 1990년에 이르면 농림어업 9.0%, 광공업 29.4%로 변모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계층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노동자 계층의 비율이 농어민 계층의 비율을 능가하게 되었으

며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1970~80년대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국가적 성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5년의 48.4%에서 1990년에는 74.4%에 이르고 있다.

소득구조의 측면에서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70년대에 악화되다가 1980년대에는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국민의 소득 분배에 대한 인식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규소득구조에서 포착되지 않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정규소득, 일부 재벌에 대한 국가 지원에 의해 부의 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성장우선의 경제발전전략과 국가중심적 발전에 대하여 변화가 필요하다는 반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의 국가주도의 산업화정책이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의한 자립경제의 기반 구축과 산업구조의 근대화에 초점을 둔 반면,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산업화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며, 성장과 균형을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으로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경제개입이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왔지만, 동시에 국가주도형 산업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광범위하게 논의된 민간주도형 경제운용으로의 전환, 금융시장의 자율화, 경제개방화 등은 국가주도형 산업화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되어 제기된 것이었다. 즉 국가의 과도한 경제개입이 시장경제의 창의성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가주도형 국가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 점이다. 정부의 5개년계획에서도 1980년대 이후 국가주도형 성장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주도의 경제운용방식의 탈피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와같이 이 단계에서는 산업화를 주도해 온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 조정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과 조짐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심성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되어 있으며, 성장지상주의도 국가의 1차적인 정책목표였다. 제5공화국은 복지국가건설을, 제6공화국은 경제선진화와 국민복

지중진을 국정목표로 설정하여 다소 변화를 보였지만, 성장지상주의의 정책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9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에서도 성장지상주의는 일련의 개혁정책 하에서도 변화하지 않은 국가정책의 기초이며 여전히 정책의 우선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로 표방되는 국가의 목표는 오히려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다른 가치의 회생을 감수하고서도 성취해야 할 목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어 또다른 물질주의적 위상이 되어 국가, 민간기업, 국민들 모두의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

2 정치적 역학

한국의 정치에서 정당정치는 극우의 이념적 보수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정당 간의 이념적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극우의 이념은 경제적 효율과 성장을 지고의 가치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의 이념적 보수성이 성장지상주의를 성장하게 한 정치적 온상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성장을 중심으로 한 국가 - 사회관계의 정치적 역학을 분석한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정당정치의 이념적 보수의 틀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성장이 성장지상주의의 국가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세력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지상주의의 경제적 성과는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여 정치역학의 변화 가능성을 태동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장지상주의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발전과 함께 산업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성과 계급적 성격이 강한 핵심적 노동자층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공업, 운수, 광업노동자(상용, 임시고용)로 구성된 핵심노동자층은 1960년의 4.4%에서 1970년에는 9.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전반에 걸쳐 계급갈등은 현재화되지 않았다.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1961년 14개 산별 172개 지부에 96,831명의 조합원이 1971년에는 17개 산별 437개 지부에 493,711명으로 증가하였지만, 노조 조직율이 1960년도를

통하여 대체로 20% 남짓한 수준이었고 노동운동은 국가의 조합주의적 통제정책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다만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 경제성장 우선정책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노동쟁의의 증가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초 발생한 일련의 노동자분신 사건이 장차 노동운동이 본격적인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 것을 예고하였을 뿐이다.

또한 국가는 통치권 운영방식에 있어서 입법부의 주도성보다 행정관료의 기술관료적 메카니즘에 의존하여 권력의 폐쇄성과 경직성이 강화되었다.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계획의 입안 추진과정에서 성장한 기술관료는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어 한국의 정치과정에서의 탈정치적, 위계적 질서를 강화시켰다. 효율성을 위주로 한 강력한 관료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정치사회적 조직과의 연결망이 약한 채 국가관료 엘리트들이 제 사회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였고, 정당이나 의회의 기능이 미약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요 정책과정은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와 소수 관료와 테크노크라트에 의해 독점되었다.

1970년대 후반기는 자본주의적 경제의 급속한 전개와 더불어 노동계급의 양적 성장과 함께 노동운동의 조직화가 크게 고양되었다. 노동조합의 조직율은 1970년도의 20.0%에서 1979년도에는 23.6%까지 증가하였고 조합원은 1970년도의 473,259명에서 1976년도에 1,088,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고양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 하의 국가조합주의적 노동통제가 지속되었고, 따라서 1970년대 당시의 노동계급은 노동운동을 조직적으로 수렴하여 정치적 참여의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산업화 추세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온 노동계급의 구성비율이 농민 등 타 사회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는 시기로서 국가와 사회 관계의 구조적 변천을 가져오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즉 국가와 사회의 역학관계에서 “민간사회의 힘이 커지고 국가에 대한 도전이 거세어짐에 따라 국가의 사회에 대한 지배력은 감소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²⁾ 노동운동에 있어 노조의 조직율은 1980년대 전반부에는

전두환 정부의 노동통제 정책으로 15%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다시 증가하여 1990년도에는 21.7%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70년의 9.7%에서 1980년에는 16.7%로 증가한 산업노동자 중심의 핵심노동자층은 198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이 증가한 핵심노동자층은 “자본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조직성과 노동조직 속에서 단련된 규율을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노동계급의 기본 이해를 실현시키는 운동에 있어서 선두에 있게 되는 층”이라는 점에서 국가 - 사회 관계의 변동에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다.³⁾ 이러한 노동계급의 양적, 질적 성장으로 사회기층세력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크게 고양되었으며 1987년 6.29선언에 의한 정치민주화를 계기로 노사분규가 급증하여 1987년도에는 3,749건에 달하였다. 이러한 국가 - 사회의 역학관계의 변화로 국가는 노동관계법을 개정(1987)하여 자주적 노조운동을 인정하고 노사분규에의 개입을 자제하는 등 조치로 노동통제를 다소 완화하였으며, 노동과 자본의 관계도 국가의 불간섭주의 정책으로 직접적인 협상관계로 전환되었다. 결론적으로, 80년대 이후 노동자계급의 성장으로 정치적 역학관계가 다소 변화함으로써 복지와 분배에 대한 요구를 다소 관철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이념적 보수성의 정당정치의 틀 속에서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의 정치구조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념적 보수성은 무엇보다도 남북분단의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3. 사회적 병리

1) 서두르는 병

성장지상주의가 가져온 사회병리의 하나는 서두르는 병이다. ‘빨리빨리’ 신드롬으로 표현되는 서두르는 습관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사에 합리적인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기 보다는 적당주의, 불합리와 편법을 동원하거나 묵

2)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2, 388쪽.

3) 서관모,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연구”, 1987, 112-117쪽.

인하게 되며, 사회전반의 부실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2) 사회범죄와 부조리- 도덕적 삶의 가치 희생

성장지상주의와 함께 사회범죄와 부조리는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범죄 건수에 있어서 1980년의 595,277건에서 1993년에는 1,356,914건으로 증가하였다. 현 정부의 사정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극복되지 않는 한, 도덕적 삶의 가치는 계속 희생될 수밖에 없다.

4 비복지 - 사회적 비용

1) 복지의 후진국

성장지상주의의 팔목할만한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파이의 분배' 논리에 따라 성장의 과실을 자본의 확대 재생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국민복지는 상대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O.E.C.D. 국가 등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도 현저하게 낮은 자원을 사회복지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GN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970년 1.15%, 1980년 2.04%, 1990년의 3.18%로 극히 낮은 수준이며 증가도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예산대비 사회복지 및 복지부문의 재정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9.3%(1993년도 기준)로서 경제수준이 유사한 브라질(19.92%), 멕시코(12.36%), 대만(17%)은 물론이고 국민소득 최하위 국가인 스리랑카(16.47%), 이집트(12.0%)에도 못미치는 복지후진국이다.⁴⁾

이러한 복지후진국의 상황은 성장지상주의의 사회적 비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이 어떠한가를 총체적으로 보여 준다. 이에 따라 빈곤문제, 주거문제, 노동문제, 환경문제, 사회범죄와 부조리 등 각종 사회문제가 한국 사회가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로 남아 있다.

4)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240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복지현실과 국민복지최저선」, 1995.

2) 빈곤문제 - 최저생활보장과 균등한 삶의 희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사회개발정상회담 시에 제출한 한국 사회의 빈곤실태에 의하면, 절대 빈곤층은 인구의 10%, 상대적 빈곤층은 인구의 30%로 추계되고 있다(참여연대). 1989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계한 최저생계비는 5인 가족 기준으로 396,204원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수준에 미달되는 절대빈곤인구는 전체인구의 10%가 된다. 한편, 1989년 기준으로 도시가구 평균지출 60% 이하의 인구를 상대적 빈곤층으로 잡게 되면 전체인구의 30%가 된다. 1992년 기준으로 보면, 도시가구 평균지출(4인가구)은 월 941,900원으로 이의 60%인 월 565,140원 이하인 자가 전체인구의 30%가 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하면, 19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주택보호대상자가 재산 1,700만원 이하로서 1인 월소득 16만원 이하이며,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 2,000만원 이하로서 1인 월소득 17만원 이하이다. 이 기준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인구의 4.3%인 1,902천 명으로 추계된다.⁵⁾

이러한 책정기준은 도시가구 평균지출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생계보호의 급여수준도 1993년의 경우 대상자 책정 기준에 비해 주택보호대상자는 43.1%(월 56,000원), 시설보호대상자는 43.8%(57,0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헌법의 생존권 보장 이념을 실현치 못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크게 대비된다.⁶⁾

3) 주거문제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조건의 희생

한국의 주거빈곤은 주거빈곤의 측정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빈곤계층 밀집지역에 다수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연소득대비 주택가격이 7.5배에 달하여, 미

5)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94, 233-234쪽.

6)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사회의 빈곤실태”, 1995.

국의 3.4배, 일본의 5.9배보다 훨씬 높다. 대도시 지역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도시지역내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설하는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빈곤층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⁷⁾

4) 노동문제 - 인간다운 노동조건의 회생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이 확대되어 1993년 기준 실업율은 2.4%로서 매우 낮다.⁸⁾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임시직, 파트타임 등 비정규 고용형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노동조건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인력부족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여 5·6만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4·5만명이 더 들어와 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차별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어 있다.

5) 환경문제, 교통문제 - 쾌적한 삶의 조건의 회생

한국에서 환경오염의 문제는 성장지상주의의 공업화, 도시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실업과 빈곤의 탈출을 열망하던 성장정책은 환경문제를 관심 밖에 두었으며,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극심한 환경오염문제를 초래하였다.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토의 무분별한 파괴는 행정의 무능과 관료화에 의해 촉진되었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4대강 유역의 수질은 2급수 이하로 오염되었으며, 산업폐기물도 연 22.5% 증가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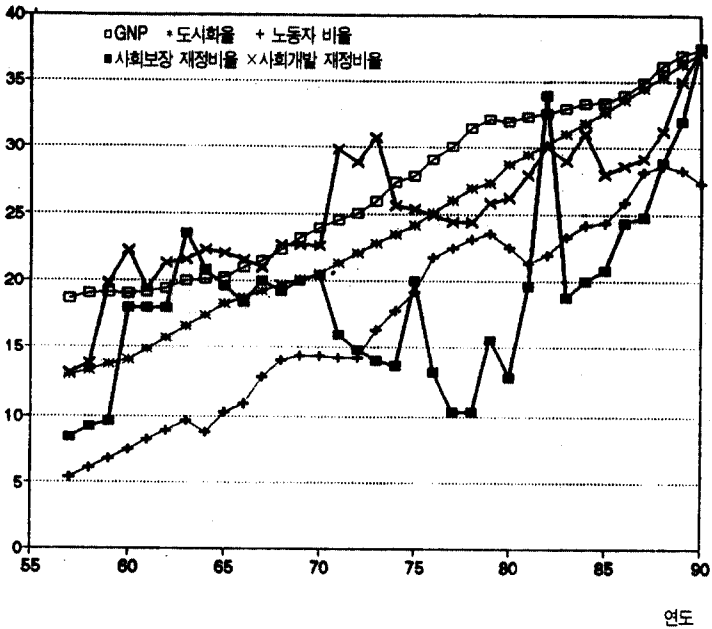
7) 전국도시빈민협의회, “변화하는 도시사회와 주거문제”, 1995.

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71쪽.

9) 환경운동연합, “한국적 사회개발모델과 환경문제”, 1995.

III. 성장, 정치역학과 복지의 관계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소득을 증가시켜 절대적 빈곤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를 추구함에 있어 성장과 분배 가운데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많은 이론적 논쟁이 있어 왔다. 대체로 선성장-후분배 전략, 선분배 - 후성장



<그림 1>¹⁰⁾ 한국의 산업화 변수와 사회보장, 사회개발재정의
시계열(時系列) 변동 추이

10) 이 그림은 각 변수의 변동 추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원 자료를 조정하였음: $\log(\text{GNP}) \times 10$, 도시화비율 $\times 1/2$, 사회보장비율 $\times 4$, 그의 변수는 원자료를 사용함.

전략, 성장 - 분배 동시전략이 있다.¹¹⁾ 한국의 경우 국가는 경제성장이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논리로 사회적 비용이나 복지의 문제를 외면한 채 성장지상주의에 기초한 선성장 - 후분배 전략을 30년 이상 유지하여 왔다.

필자는 이러한 논리가 부당하며 성장이 결코 복지의 향상을 자동적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증하고자 한다. 즉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극복이 없이는 경제는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을 요구하며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장지상주의는 성장과정의 부작용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하게 된다. 성장지상주의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복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정치역학의 요인과 복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낮은 복지수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평가해 본다.

1. 경제성장 요인과 복지

경제성장과 복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인 Wilensky(1965)는 사회복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국민 1인당 GNP로 표현되는 경제성장을, Flora & Alber(1981)의 연구에서는 노동자인과 도시화비율을 제시하였다. 즉 산업화 이론으로 일컬어지는 이 이론의 가설은 국민일인당 GNP 수준 또는 노동자 인구나 도시화 비율의 증가가 사회복지재정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과 사회복지재정과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¹²⁾

11) 김기원, "사회복지, 경제성장, 소득분배의 상호관계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6호,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1995, 22-26쪽.

12) 그러나 Wilensky 등의 연구에서는 다국가 간 cross-sectional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개별국가에 대한 time-series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이 분석의 결과 사회복지 변천에서 산업화 요인에 관한 설명력의 평가는 한국의 사례에 대하여 한정된다.

1인당 GNP, 도시화율, 노동자비율의 증가는 각각 사회개발 또는 사회보장 재정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산업화이론의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나타내는 독립변수의 척도로는 경제성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 1인당 GNP 수준과, 경제성장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척도로서 2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인구의 비율, 도시화비율을 사용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측정하는 종속변수의 척도로는 정부예산 대비 사회개발, 사회보장 부문의 예산 비율을 사용하였다. 사회개발 예산에는 사회보장, 보건, 주택과 지역개발, 교육이 포함되었다. 사회보장예산에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복지서비스의 재정이 포함되었다.

이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계열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화 변수와 사회보장, 사회개발재정 변수의 시계열 변동 추이는 위의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서 산업화 변수는 연도의 진행에 따라 일정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회보장과 사회개발 재정의 변화는 매우 불규칙한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사회보장비, 사회개발비재정 비율)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은 시계열의 회귀 모형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조정된 time lag 변수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다음 표의 분석 내용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계열 모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langle \text{모형} \rangle \quad Y_t = a + b_1 Y_{t-1} + b_2 X_{1,t-1} + b_3 X_{2,t-1} + b_4 X_{3,t-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1>과 같으며, 변수들 간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1> 사회보장, 사회개발재정과 산업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표 (N=34)

변수명	X ₁ 일인당 GNP	X ₂ 노동자 비율	X ₃ 도시화 비율
Y ₁ (사회보장재정비)	.119 (.254)	.092 (.305)	.108 (.275)
Y ₂ (사회개발재정비)	.033 (.428)	.008 (.482)	.019 (.458)

()은 유의도

<표 2> 사회개발재정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표(1957~1990) (N=34)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한 회귀계수	T값	유의도
도시화율	-.039	-.238	-.211	.834
노동자 비율	-.259	-.803	-.697	.492
1인 GNP	.040	.051	.784	.439
회귀상수	-3.782			
R ²	.024			

자료: <표 4> 사회경제 변동과 사회복지재정

<표 3> 사회보장재정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표(1957~1990) (N=34)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한 회귀계수	T값	유의도
도시화율	-.006	-.069	-.062	.951
노동자 비율	-.156	-.903	-.789	.436
1인 GNP	.022	1.078	.804	.428
회귀상수	-2.712			
R ²	.038			

자료: <표 4> 사회경제 변동과 사회복지재정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복지 재정간의 관계에서 산업화 요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변수는 사회개발 또는 사회보장재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계량적 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사회개발 또는 사회보장 재정의 양적 변화에 관한 사회 현상에 한정된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른 요인에 의한 설명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재정과 산업화 변수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제기될 수 있는 어려움은 특히 위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은 극히 불규칙한 사회복지재정의 변동추이 이외에도 GNP 성장 수준에 비해 사회복지 부문에서 국가재정 지출비율의 취약한 수준은 위의 산업화이론의 양적 논리의 적용에 의한 설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의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의 질적 분석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 외의 다른 요인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2 정치역학 요인과 복지

노동자계층의 지속적인 성장은 <표 4>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러나 노동자계층의 양적성장과 복지지출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1960-70년대까지는 노동계급이 사회적 구성에서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력이 미약하였으며, 이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적 힘이 미약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과정에서는 관료와 군부엘리트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면서 기층세력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에는 노동계급을 중심으로한 사회 기층세력의 성장과 조직화가 두드러지면서 사회정치민주화와 아울러 복지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었으며, 국가는 노동계급에 대한 물리적 통제와 함께 사회복지의 수단을 활용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

<표 4> 한국의 사회경제변동과 사회복지재정

사회경제변동					사회복지재정 구성(%)				
연도	1인 GNP	노동자 비율	도시화 비율	해가족 화비율	교육	보건	사회보 장	주택	소계지 역개발
57	74	5.4	25.9	73.4	8.5	1.2	2.1	1.3	13.1
58	80	6.1	26.6		9.7	1.1	2.3	0.6	13.7
59	81	6.8	27.3		14.6	1.2	2.4	1.6	19.8
60	80	7.5	28.0		15.1	1.2	4.5	1.4	22.2
61	82	8.2	29.7		13.1	0.9	4.5	0.9	19.4
62	87	8.9	31.4	76.8	13.7	0.9	4.5	2.2	21.3
63	100	9.7	33.1		13.4	1.1	5.9	1.2	21.6
64	103	8.8	34.8		14.6	1.1	5.2	1.4	22.3
65	105	10.3	36.6		15.0	1.0	4.8	1.0	21.9
66	125	10.9	37.5		15.4	0.9	4.6	0.7	21.6
67	142	12.8	38.4	75.6	14.4	0.8	5.0	0.8	21.0
68	169	14.0	39.3		16.1	0.9	4.8	0.9	22.7
69	210	14.3	40.2		16.1	1.0	5.0	0.7	22.7
70	252	14.3	41.1		16.0	1.0	5.1	0.5	22.6
71	289	14.2	42.6		17.7	2.6	4.0	5.5	29.8
72	319	14.2	44.1	76.5	17.6	2.2	3.7	5.3	28.8
73	396	16.3	45.6		18.3	2.3	3.5	6.6	30.7
74	542	17.8	47.0		14.6	1.8	3.4	5.8	25.6
75	594	19.1	48.4		13.6	1.7	5.0	5.1	25.4
76	803	21.8	50.2		15.1	1.7	3.3	4.8	24.9
77	1012	22.4	52.0	76.5	14.7	2.0	2.6	5.2	24.5
78	1396	23.1	53.8		14.1	2.2	2.6	5.6	24.5
79	1644	23.6	54.6		14.5	2.0	3.9	5.4	25.8
80	1592	22.5	57.3		14.4	2.6	3.2	6.0	26.2
81	1734	21.3	58.9		14.4	1.0	4.9	7.5	27.8
82	1824	21.9	60.5	76.5	17.0	1.2	8.5	3.3	30.0
83	2002	23.3	62.1		17.9	1.5	4.7	4.8	28.9
84	2158	24.2	63.7		16.8	1.3	5.0	7.9	31.0
85	2194	24.4	65.4		16.6	1.3	5.2	4.8	27.9
86	2505	25.9	67.2		17.0	1.5	6.1	3.9	28.5
87	3110	28.1	69.0	76.5	17.1	2.2	6.2	3.6	29.1
88	4127	28.5	70.8		17.7	2.1	7.2	4.2	31.2
89	4994	28.2	72.6		17.1	1.9	8.0	8.0	35.0
90	5569	27.3	74.4		18.5	2.1	9.4	7.4	37.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연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대한통계협회, 「한국의 사회지표」, 1991.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각연도.

였다. 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은 80년대 후반 이후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극우의 보수적 이념과 성장지상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는 정치역학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복지지출의 증대 노력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평가

한국에서의 경제성장은 그 성공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복지의 향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성장이 국민복지 향상의 기본적 조건을 창출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이는 경제성장이 복지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산업화이론의 한국적 적용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정치역학의 요인에 의한 설명은 복지에의 낮은 분배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1980년대 중반까지 노동자계급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요인은 극히 미미하였고 특히 서구복지국가의 발전을 촉진하였던 분화된 이념정당 구도도 한국에서는 부재함으로서 사회복지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다. 특히 권위주의적 성격의 중앙집권적 국가는 분배와 복지를 외면한 성장우선주의 정책의 추진을 주도하였다. 90년대 중반에 이른 현재까지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란 또다른 이름으로 성장우선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심지어 복지의 향상을 언급하면서도 “압축적 복지성장” 또는 “생산적 복지”라는 성장우선주의의 가치에 물든 용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민복지 발전을 저해한 요인은 남북한 분단이라는 독특한 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소에 의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냉전구조가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한 이후에도 남북한 대결구도의 기본적인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예산의 30% 이상을 점하는 군비지출은 복지 부문에의 지출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상과 같은 평가에 비추어 본다면, 보수적 정치구조와 국가정책, 남북분단구조는 성장지상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실에서 성장지상주의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는 정치역학의 관점에서 국민적 복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정치세력의 성장과 국가정책의 개혁, 남북분단구조의 해소에 의한 군비지출의 감소가 현실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에 앞서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성장지상주의가 지속하는 한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에서 성장이 항상 우위를 점하게 되며, 사회적 비용은 계속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IV. 대안

1. 성장지상주의 가치의 타파

지금까지 필자는 성장의 정치사회적 진단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성장지상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함에서 찾아야 함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지상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것인가? 자본주의적 물신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물신숭배의 우상과 대결하여 인본주의에 의한 유토피아를 지향한 거대한 흐름이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기초한 사회주의도 또다른 물신숭배에 지나지 않았으며, 1세기에 걸친 사회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종결되었다. 이

제 자본주의의 물신은 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처럼 끝도 없는 성장지상의 목표를 향해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으며 파괴적인 사회현상을 노출시키고 있다. 성장지상주의의 우상은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가정생활, 교육과 문화 등 곳곳에 침투해 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실상을 성경적 가치관에 비추어 조명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교회는 우선 스스로 성장지상과 물질적 번영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사회에 빛을 비추기보다는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을 회개하고 갱신해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며, 행함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나아가 교회는 성장지상주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우상임을 성도들에게 자각시켜야 하고 한국 사회에 대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2 국가정책 우선순위의 조정

성장지상주의의 가치에 기초한 정책을, 공평한 분배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그 우선순위가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항목에 1차적인 정책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

① 국민적 최저생활선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재가와 사회복지시설의 무의탁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국민적 최저생활선의 100%까지 보장하도록 상향되어야 한다.

②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성장과 개발의 명목으로 하는 환경파괴는 중단되어야 하며, 파괴된 환경은 최대한 복원하여야 한다.

④ 복지와 사회개발을 위한 투자를 국민소득의 수준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는 바, 위와 같은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

한 정책목표들도 성장지상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한, 그 실행이 극히 어려웠다는 사실을 지난 30년 간의 성장지상주의의 역사적 경험이 말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3. 공동체적 삶의 문화 확립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삶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공동체적 삶은 새로운 삶의 방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국가복지 향상의 과제는 이러한 공동체적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사회정책학자 Mashall이 언급한 바와 같이 참된 의미의 복지가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의 결합이라고 한다면,¹³⁾ 물질적 복지와 아울러 공동체적 정신과 삶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건전한 시민운동으로서 기독교시민단체 등의 활동의 강화가 요청된다.

13) T. H. Mashall, *The Right to Welfare and Other Essays*, London: Heineman Educational Books, 1981, p. 54.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 김기원, “사회복지, 경제성장, 소득분배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6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5.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94.
-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2.
- 서관모, “한국사회 계급구성의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전강수, “경제개혁에 대한 성경적 조망”, 「94통합연구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1994.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1, 1994.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1992.
-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통계자료집」, 1992.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0.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 사회발전정상회의 95사회발전민간기구포럼, 「한국사회발전보고서」, 인간사회발전한국포럼, 1995.
- “한국형 경제개발역사 개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사회의 빈곤실태”, 참여연대
 - “변화하는 도시사회와 주거문제”, 전국도시빈민협의회
 - “사회복지와 국민생활최저선”, 참여연대
 - “한국적 사회개발모델과 환경문제”, 환경운동연합
- Mashall, T. H., *The Right to Welfare and Other Essays*, London: Heineman Educational Books, 1981.
- Wilensky, Harold,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 WSSD Official Documents,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United Nations, 1995.
-----, "Social Development in Korea", *National Report for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Republic of Korea, 1995.*



■ 오정수 ■

서울대 및 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사회정책 Post-Doc과정 수료. 부산여자대학 교수 역임. 현 충남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직 중. 현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실행위원, 「아동청소년 복지론」, 「성경적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원리」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음.